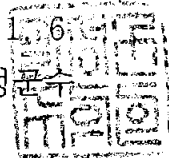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9
----------	-----

제출일자 : 2011. 6.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원대상자에 장애인세대를 추가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명칭변경
- 나. 지원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추가
(안 제3조)
- 다. 보험료의 지급방법, 지원중단, 환수 조항 신설(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8,000천원(2011년 제1회 추경요구)
- 다. 입법예고 : 2011. 5. 11. ~ 5. 31. - 의견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통지하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으로 한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 등) ①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